

민주 “헌법재판관 공식 3인 국회 몫… 9인 체제 바람직”

대통령 대행 ‘임명권·재의요구권’ 권한 범위 놓고 격돌 국회 “농업 4법 등 쟁점법, 거부권 적극 행사해야” 몽니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국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큰 걱정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 정부와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

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 횡포”라며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우리 시장경제 및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지난해 3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수석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보상특별법안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또 사면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위선적인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며 “구태정치인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행 “내년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국무회의 주재… “민생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금융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취약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

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준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6일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더플러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노상원, 비선 조직 꾸려 계엄준비 정황”

민주 진상조사단 “軍에 ‘노 라인’ 만들어… 북과 공작부대 사실상 통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편제에도 없는 군 조직을 꾸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새로운 정황이 제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상원은 정보사와 별도로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을 꾸려 ‘노상원 라인’을 구축한 다음, 이 조직을 통해 OB(예비역)를 이끌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는 편제에 없었던 조직으로,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으로 보인다”며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특수임무대)와 알삼즈 등 북과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은 “노상원이 장군 인사에 개입해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인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주요 인원을 포섭한 정황이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노상원과 친분이 있는 방모 준장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라는 임시 직제에 있다”가 지난 10월 소장급 보직인 통합기획관을 만들어 보직했다”며 “(노씨와 친분이 있는) 배모 준장은 김 전 장관 인사청문회 TF에 참여한 뒤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수도권경찰학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교령 작성 등 계엄을 기획했다고 아전에서 지목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고성 오간 원내대표 첫 회동

헌법재판관 임명·국조 이견

여야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및 비상계엄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

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은 고성이가 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시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넣어 표결에 유리하게 하려

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건 헌법재판을 지연하고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추천 2명(인사청문회)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6개 야당이 제출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일 안에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고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